

# 20조 추경 추진에 여야 충돌… “경제 대응” vs “현금 살포”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식화  
與, 추경안 빠른 심의·의결 방침  
野 “선거 앞둔 포퓰리즘 정책”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밤을 새서라도”란 표현을 쓰며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 급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사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오무선 3.15유족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

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

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있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16일 예정된 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동 정세를 핑계 삼아 독재적 재정 폭주를 하면서 ‘현금 살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유동성이 넘치고 중동 사

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票)폴리زم’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방탕한 경제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은 국회 의사일 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과 같은 쟁점 법안을 올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바로 상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위주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민주당, 檢개혁 법안 이견 속 이달 처리 목표 정부 고심… “청해부대 투입시 국회 변수”

구체적 구조·권한 배분 두고 내홍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 내부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내용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조율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쟁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논란이 계속된다면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중수청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며 16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공소청 설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한다. 당초 20일 법사위 법안심

사1소위 입법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일정 확정이 안 됐다.

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우려했다.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내부 조율에 나섰다.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현실론’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을 설득하는 분위기다. 거기다 최근 일각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청래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것 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

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물밑 조율’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안 수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기술적 보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검찰개혁 논란이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선거로 인해 법안 처리도 늦어져, ‘개혁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르면 19일 본회의에 중수청·공소청법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럼에도 이번 3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늦어도 31일에는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 1면 ‘트럼프 호르무즈’서 계속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 군함 파견이 참전으로 비치게 되면 자칫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도 감내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와 미사일 공격 등 위험성이 있어, 작전 자체가 워낙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요구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에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우리 군함이 파견된다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이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아덴만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더군다나 당시엔 ‘독자 작전’이었고, 이번엔 다국적군으로 작전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해부대 임무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서예진 기자

##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오세훈 참여해주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천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천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접수를 진행하고, 18일에 바로 면접을 진행해 공천 절차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반복한 후 나온 첫 조치다. 지난 13일 공천관리위원장 직을 전격 사퇴했던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 “엄치었지만 다시 공천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당대표가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위원장이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신청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였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절원 결의문’이 선언에만 그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지사 후보 선출 위해 2단계 압축경선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는 안된다며, 당의 노선변화에 대한 지도부의 실천을 촉구한 바 있다.

공천위는 자료에서 “오 시장은 우리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이재명 대통령, 與 초선의원과 만찬

원팀 강조하며 입법과제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벌어진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67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을 만나 다양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당청원팀 공조를 강조하며 입법과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만찬에서는 중동 상황을 둘러싼 정부 대응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입

법 과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두루 다뤄질 전망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진 데 대해 언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 내용이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예진 기자